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1, Vol. 35, No. 1, 99-119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1.005

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의 효과: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

윤 상 연 **김 혜 진** **허 태 균†**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조절초점 이론에 기초하여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이 사법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특히 처벌요소와 감경요소가 혼재해 있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조절초점이 처벌판단(처벌강도 및 형량)에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의 관계, 그리고 선택적 정보처리의 역할을 확인하였다. 시나리오를 이용한 설문조사 결과 조절초점성향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정보선택 과정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하였고, 처벌수준에 부합하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 2에서는 조절초점을 조작하여 연구 1의 결과를 인과적인 수준에서 재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예방초점과 향상초점을 조작한 두 가지 조건에서 처벌판단과 정보선택 특성을 확인한 결과 연구 1의 결과와 동일하게 조절초점 조건별로 처벌강도가 달랐고, 선택적인 정보처리가 이 관계를 매개하고 있었다. 연구 3에서는 사법판단에서 조절초점에 따른 판단목표의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절초점의 효과를 동기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처벌판단에 대한 판단목표의 효과는 조절초점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향상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컸지만, 예방초점이 지배적인 집단은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작았다. 본 연구를 통해 처벌판단에 대한 조절초점의 효과는 선택적 정보처리에 의해 매개되며, 동기화된 목표에 영향을 받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는 연구결과의 사법판단 적용 가능성과 추후 연구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조절초점, 사법판단, 선택적 정보처리, 목표와 동기

---

* 본 연구는 윤상연의 박사학위 논문 자료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교신저자: 허태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tkhur@korea.ac.kr

www.kci.go.kr

"법관은 법률의 입(la bouche de la loi. Montesquieu, 1949)"이라고 했을 만큼 사법판단은 주관의 개입을 꺼리며, 모든 판단자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합리성을 강조한다(Gewirtz, 1996). 이처럼 사법판단을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보는(Becker, 1968; Posner, 1985) 전통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연구들은 사법판단에서의 '제한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Simon, 1972)'을 확인해 왔다(Guthrie, Rachlinski & Wistrich, 2000). 다수의 연구를 통해 사법판단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지적 편향(Hagan, 1973; Johnson, Wistrich & Guthrie, 2009; Rachlinski, Wistrich, Guthrie & Rachlinski, 2005), 방략(heuristics), 고정관념(stereotypes), 편견(prejudice)과 같은 체계적인 오류들이 확인되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한적 합리성은 배심원뿐만 아니라 판사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김청택, 최인철, 2010;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Korobkin & Ulen, 2000) 사법판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Simon(2012)은 그의 책 서문에서 형사절차의 주인공들이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절차에서 나타나는 기억, 인지, 평가, 추론, 결정과 같은 심리적 과정들이 도덕판단, 정서, 그리고 동기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상준(2015)은 사실인정과 판단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관적 왜곡 요인이 존재하며, 법적 판단의 전문가인 판사가 직관과 숙고 사이에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피력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사법판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단편적인 논의보다는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어떻게"와 "왜"에 대한 문제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의사결정 영역에서 진행되어 온 연구들을 사법판단 분야에서도 적용한다면 사법판단을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사법판단에서 목표나 동기가 미치는 효과와 그 심리적 과정(Simon, 2012)에 주목하였다. 목표설정이론(Goal Setting Theory. Locke, Bryan & Kendall, 1968)에 따르면 목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사물이나 상태이고 목표는 동기를 형성하여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을 설정해주는데, 사법판단 과정에서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구체적 목표와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법판단 연구와 한계

사법판단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일관되게 사법판단에서의 인지적 편향을 보여주고 있다(Rachlinski et al., 2009). 그러나 사법판단에 적용되는 이러한 인지적 패러다임은 전형적인 실험적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Guthrie 등(2000)의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정박효과(anchoring effect), 구조화효과(framing effect), 사후과잉확신 편향(hindsight bias), 자기중심적 편향(egocentric bias), 대표성 추단법(representative heuristics) 등에서 자극으로 제시되는 사례는 사법판단 상황에서도 지나치게 특수한 문제 또는 상황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법판단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과를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과거에는 사법판단 연구들이 특정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Shauer(2008)에 따르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사법작용 중에서도 사실의 발견(fact-finding)과 평결(verdict-rendering)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판단(judging)의 측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했다. 사법판단에서 증거들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는 추론의 과정이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근 사법판단 연구 영역에도 판사의 성별, 성격, 태도, 과거 경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Harris & Sen, 2019; Klein & Mitchell, 2010; Voeten, 2019),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일반적인 연구성과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www.kci.go.kr

못하고 있는 만큼, 판단자 개인 특성이나 상황에 따른 사법판단의 차이를 다루는 연구들이 필요하다.

사법판단의 특징

사법판단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판단이 가지는 의사결정으로서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사법판단 상황이 딜레마를 야기하는 주된 이유는 합리성의 기초가 되는 증거(정보)의 확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Pennington과 Hastie(1993)는 사법판단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민감성, 완벽한 정보, 이성을 갖춘 의사결정자가 확률적이고 수학적인 공리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판단 상황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사법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은데(이상돈, 2005), 과거의 사실에 의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정보의 부족, 대립되는 당사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는 정보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결국 판단자는 사법판단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보완하여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비관련 정보, 즉 법률 외적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판단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때 정서, 동기, 목표 등의 개인 특성은 판단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령 형사사건에서는 반사회적 행위인 범죄에 대한 처벌 욕구(Feigenson, 2000; Weiner, 1995) 등, 내면화된 도덕적 감정이 개입된다(Goodenough, 2001). 배심원에 대한 검사 구형량의 정박효과를 연구한 국내 연구에서도 (사건과 독립적인) 정서상태에 따라서 정박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유미, 조영일, 2020, 연구2 참조).

사법판단 상황에서 목표나 동기의 역할 역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된다. 가령, 개인의 선고목표에 따라서 처벌여부와 처벌수준이 달라지거나 (Oswald, Hupfeld, Klug & Gabriel, 2002), 가정된 개인의 역할(검사 또는 변호사 역할의 부여)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Simon, Stenstrom & Read, 2008). 훈련된 판사들조차 법률 외적인 기준들의 영향을 받으며(Kramer & Ulmer, 2009), 법적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누구든 비합리적이고 법원칙에 어긋나는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이다니, 박광배, 2017; 한유화, 박광배, 2018). 따라서 사법판단은 불활실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기조절(self-regulation) 과정의 성격을 띤다.

조절초점이론

자기조절은 자기개념을 실행에 옮기고, 행동을 수정하고, 환경의 변화를 통해 자기지각과 개인적 목표들에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심리적, 행동적 과정을 뜻한다(Fiske & Taylor, 1991). Higgins(1997)는 자기조절에 있어서 주된 목표와 그 목표의 추구방식을 유형화하여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으로 구분하는 조절초점 이론(Regulatory Focus Theory)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향상초점은 성장과 이상 등의 목표에 의해 동기화되는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과 의무 등의 목표에 의해서 동기화된다. 조절초점에 따라서 목표 추구 방식(goal pursuit manner)도 다르다. 향상초점 하에서는 목표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Scholer, Stroessener & Higgins, 2008)이 있는 반면, 예방초점 하에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신중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Byrant & Dunford, 2008).

조절초점은 사고와 행동 등 상황에 대한 대응방식을 결정하는 기본적인 경향성으로, 각기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된다. Higgins(1997)에 따르면, 향상초점은 성장욕구가 강하거나 강한 이상을 가진 개인, 또는 성취와 무성취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반면, 예방초점은 안전욕구가 강하거나 강한 의무감을 가진 개인, 또는 상실이나 무상실과 관련된 상황에서 나타

www.kci.go.kr

난다. 이처럼 개인의 성향이나 상황적인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조절초점에 따라 각기 다른 의사결정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향상초점 하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접근(approach) 전략을 사용하며, 부작위(ommission)[1]를 회피하게 된다. 반면, 예방초점 하에서는 부정적인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회피(avoidance) 전략을 사용하며, 작위(commission)[2]를 피하고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조절초점에 따른 목표지향성과 선택적 정보처리

자기조절은 정보처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보처리의 인도, 특정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 관심, 목표, 가치 등을 자기(self)와 관련짓게 만든다(Fiske, Lindzey & Gilbert, 2010; Higgins, 1996). 기존 연구에 따르면 조절초점에 따라서 목표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Dholakia, Gopinath, Bagozzi & Nataraajan, 2006). 향상초점 하에서 발생하는 목표의 성격은 주로 성취나 발전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러한 목표의 성격은 노력을 더 기울일수록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최대목표(maximal goal)라고 한다. 반면, 예방초점의 경우에는 주로 안전과 유지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목표들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것이지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목적만 달성하면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를 최소목표(minimal goal)라고 한다.

목표의 성격에 따라서 목표에 대한 지향성이 달라지는데, 향상초점이 더 목표지향적이고, 예방초점은 덜 목표지향적이다(Crowe & Higgins, 1997; Dholakia et al., 2006). 또한 향상초점에서는 목표에 강하게 접근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조절 강도가 강한 반면, 예방초점 하에서는 목표에 불일치하는 결과를 회피하는 경향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조절강도가 약한 경향을 보인다(Zhu & Meyers-Levy, 2007). 조절강도는 목표에 따라서 자기조절을 얼마나 잘 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절강도가 강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 Dholakia 등(2006)은 소비자들의 조절초점과 유혹(temptation)에 대한 갈망의 조절능력을 연구하였는데,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유혹물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느꼈지만, 갈망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유혹물에 대한 갈망이 낮았다. 연구자들은 이를 목표에 따른 자기조절 능력 수준의 차이로 해석했다.

한편, 조절초점에 따른 목표지향성은 목표 수행과정에서의 정보처리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Bruner, Goodnow, Austin(1956)은 정보처리의 방식은 목표로부터 도출되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하였다. 즉, 동기화된 목표가 자동적인 자기조절 과정을 이끌어내고(Bargh, 1997; Bargh, Gollwitzer, Lee-Chai, Barndollar & Trötschel, 2001), 자동적 정보처리 과정에서의 전략과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Hart et al., 2009). 선택적 정보처리 과정에서 사람들은 목표에 따른 결정에 부합하는 정보들을 선택하는 것이다(Frey, 1986; Sanbonmatsu, Posavac, Kardes & Mantel, 1998). 즉 조절초점은 선택적인 정보처리와 관련되어 있다.

향상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 즉 목표와 관련된 정보들을 중심으로 처리하는 반면(Pham & Chang, 2010; Pham & Higgins, 2005), 예방초점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와는 무관한 불필요한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하지 못하여 과제수행 수준이 떨어졌다(Friedman & Förster, 2001). 결국 향상초점이 지배적인 경우 목표 또는 과제에 따라서 유연한 정보처리가 가능한 반면, 예방초점이 지배적인 경우 경직된 정보처리를 하고 선행 정보 등에 고착되는 경향이 있다(Förster, Friedman & Lieberman, 2004; Wallace, Butts, Johnson, Stevens & Smith, 2016). 사법판단 역시 의사결정 과정이자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

1)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상 의무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2) 의식적인 의사에 의하거나 의도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

www.kci.go.kr

이므로 사법판단 상황에서 조절초점의 효과 검증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절초점과 사법판단(본 연구)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반적인 의사결정과는 달리, 사법판단은 법률 등의 객관적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규범적 사고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연구자들은 여전히 사법판단에 대해서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과들을 적용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만약 사법판단이 법학에서 주장하듯 순수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러한 주장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판단(결과)의 일치일 것이다. 즉,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증거에 의해서 평가한다면 복수의 판단자들이 내리는 결과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단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심급 간, 합의체 판사 간, 판사와 배심원 간, 판결과 여론 간 판단의 불일치는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판단에서의 인식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처리 과정 중 목표 설정과 정보 선택 두 가지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첫째, 사법판단에서도 다양한 목표가 설정되는데, 판단자들은 조절초점에 따라서 다른 목표 설정과 접근 방식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응보, 억제와 같은 판단자의 선고목표(sentencing purpose)에 따라 처벌수준이 결정되거나 목표에 의해 동기화된 인지적 과정이 발생한다(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Orth, 2003). 따라서 사법판단에서 목표가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립되는 정보들이 혼재하고 있는 사법판단 상황에서 어떤 정보(증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지가 판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유무죄를 결정할 때도 선택적 정보처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ornstein & Greene, 2017; Graziano, Panter & Tanaka, 1990). 또한 사법판단에서 정보 간 관계 파악(Pennington & Hastie, 1992; Simon, 2004), 그리고 정보의 통합(Kaplan & Kemmerick, 1974) 과정이 중요한 만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법판단 상황에서 조절초점에 따라 목표 조절방식과 정보처리방식이 다르며, 그 결과로서 처벌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였다. 처벌근거와 감경근거가 혼재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을 하는 경우, 향상초점 하에서는 처벌이라는 판단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처리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처벌판단을 하는 반면, 예방초점 하에서는 판단목표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는 경향으로 인해 처벌판단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연구문제와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예방초점에 비해 향상초점이 강할수록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할 것이다(연구 1, 2).

가설 2. 조절초점과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선택적 정보처리(처벌요소 고려)가 매개할 것이다(연구 1, 2).

가설 3. 조절초점에 따른 처벌판단 수준이 판단 목표(감경 vs. 가중)에 따라 조절될 것이다.(연구 3).

연구 1

연구 1에서는 조절초점과 처벌판단 사이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기제로서 선택적인 정보처리가 발생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1에서는 일반인(lay people)들을 대상으로 설문지 방식에 의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개인의 조절초점성향을 측정한 다음 처

www.kci.go.kr

벌 요소와 감경 요소가 혼재해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서 처벌의 강도와 형량을 판단하고, 판단을 위한 인지적 과정을 확인하였다.

방 법[3)]

연구대상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에 다니는 학부생 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부실 응답(처벌판단 무응답)을 한 1명, 그리고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응답자 2명을 제외한 74명의 학생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33.8%와 66.2%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았으며(참고로 조절초점, 처벌판단 등에 있어서 남녀 간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의 분포는 19세부터 26세였고, 평균 연령은 22.12세 (SD = 1.820)였다.

연구절차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법판단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연구목적과 5,000원을 지급한다는 보상에 관해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번에 3~7명의 학생들이 실험실을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 및 시간표로 공고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조를 편성하여 1일 3회 정도 운영하였으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지는 한 사건 시나리오(편의점 강도사건)를 읽고 처벌판단과 관련된 문항들에 응답하는 형태였다. 먼저 참여자들에게 “형법 제333조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지시문을 읽게 하여 처벌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지시문을 읽고 난 다음 참여자들의 판단을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이 시나리오는 아래 제시한 바와 같이 사건 관련 정보들이지만 여기에는 처벌을 해야 할 두 가지 요소(범죄 행태 및 계획성)와 처벌을 감경해야 할 두 가지 요소(범행 동기 및 범죄자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처벌의 수준은 각 요소들을 얼마나 고려하는지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다.

시나리오: A씨는 대낮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칼로 위협하고 20만원 상당의 돈을 빼앗아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지만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A씨는 범행의 대상이 된 편의점을 미리 관찰하고 칼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A씨가 힘든 가운데서도 밝은 성격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다음에는 참여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거나 설문지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나 표현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의 목적과 조절초점의 개념을 설명해주고, 연구의 의도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사후설명(debriefing) 절차가 끝난 다음 참가비를 지급하고 돌려보냈다. 동의서 작성으로부터 사후설명까지 소요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였다.

측정도구

연구 1에서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이외에 세 가지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절초점 성향 척도는 시나리오를 읽기 전에 측정을 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를 읽은 다음에는 유무죄 판단을 하고 나서 시나리오의 내용(처벌요소, 감경요

3) 본 논문의 모든 실험과정은 고려대학교 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승인을 거친 후 시행하였다(승인번호: 1040548-KU-IRB-14-188-A-1).

www.kci.go.kr

소)에 대한 고려수준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처벌강도와 형량을 묻는 질문에 응답하였다.

조절초점 척도(Regulatory Focus Questionnaire: RFQ). 조절초점 이론에 기초하여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의 형성 수준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Higgins 등(2001)의 연구자들이 응답자의 과거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개인의 지향점을 측정하는 도구로 개발하여 조절초점 성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 척도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면서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개인의 발달적인 형성배경을 잘 반영하는 조절초점 측정도구로 평가받는다(Haws, Dholakia & Bearden, 2010 참조). 향상초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당신은 어떤 일을 성취한 후, 더 열정적으로 다른 일들을 하곤 했습니까?"와 같이 성취와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방초점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당신은 부모님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통제에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까?"와 같은 의무의 실천과 관련된 경험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조절초점 척도는 역채점 문항(R)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조절초점 성향 중 향상초점 6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73이었고, 예방초점 5개 항목의 내적 신뢰도(Chronbach's α)는 .76이었다.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은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최종적인 선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배적인 조절초점 성향(Higgins, 2002)을 확인하기 위해서 향상초점 점수에서 예방초점 점수를 뺀 차이값을 사용하였다.[4)]

유무죄 판단. 유무죄 판단 시나리오를 읽게 한 다음, 참여자들에게 사건의 행위에 대해서 우선 유무죄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유죄가 확실한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지만, 참여자들이 연구자의 의도대로 생각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유죄판단 없이 처벌판단을 하는 것은 모순되기 때문이다. 시나리오상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피험자 77명 중 75명(97.4%)이 유죄로 판단하였다(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실응답자 1인, 무죄 판단자 2인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즉, 시나리오상에서의 형사사건에 대해서 절대다수의 참여자들이 유죄로 보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사건이 유죄라는 것을 전제로 처벌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려수준. 유무죄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를 다시 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사건의 내용을 구성하는 네 개의 개별 내용(행태, 동기, 계획성, 성격)을 다시 제시하고, 각각의 내용을 얼마나 고려하였는지를 Likert 7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즉, 처벌판단을 위해서 각 내용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고려하였는지 평가해달라는 단일문항에 대해서 1(=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부터 7(=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였다)까지의 범위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처벌판단. 마지막으로 범인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처벌을 할지, 즉 처벌판단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처벌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Likert 척도에 의해서 처벌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점수의 의미가 응답자 간에 유사하고(예를 들어 4점은 보통), 간격이 동일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하나는 형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제 사법판단에서의 선고방식과 유사한 반면 비전문가들의 경우에 구체적인 형량의 의미가 매우 주관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형량이라고 하더라도 개인마다 의미하는 강도가 다르다(예를 들어 3년이라는 형량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처벌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약한 처벌일 수도 있다). 따라서 두 개의 측정 방식을 모두

4) 조절초점 성향 = 향상초점 점수(6문항 평균) - 예방초점 점수(5문항 평균)

www.kci.go.kr

사용하여 한 가지 방식에 의한 측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처벌판단 중 처벌강도는 1(= 매우 약하게 처벌)부터 7(= 매우 강하게 처벌)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을 하였고, 형량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징역형의 최단기인 1개월부터 최장기인 30년 사이에서 판단하게 하였다[5](실제로는 7년 6개월 이상으로 응답한 참여자는 없었다).

결 과

먼저 Pearson 상관분석을 한 결과,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확인되었다. 즉, 예방초점에 비해 향상초점 성향이 지배적일수록 더 강도 높은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을 뿐만 아니라(r = .33, p < .01), 형량도 더 높게 부과했다(r = .44, p < .001). 또한 본 연구가 처벌을 목표로 하는 처벌판단 과제라고 봤을 때, 사건의 구성요소들 중에서 감경요소에 비해서 처벌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고려하는 것은 목표를 고려한 선택적 정보처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적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연구자가 예상한대로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고려수준의 차이[6]가 컸다. 즉, 감경요소에 비해서 처벌요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처벌요소의 고려수준과 형량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r = .17, n.s.).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조절초점성향과 고려수준차이, 그리고 처벌강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기초로 처벌강도에 한해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초점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에서 판단 요소 간 고려수준 차이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PROCESS macro(v3.5)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절초점성향은 고려수준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 = .41, p <. 05), 고려수준 차이는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β = .26, p <. 01), 고려수준 차이가 조절초점성향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조절초점성향에서 처벌강도 간의 총효과가 β = .47(p < .01)이었으나, 고려수준 차이가 투입된 후 직접 효과가 β = .37(p < .05)로 감소하여 고려비율이 조절초점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절초점과 처벌강도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랩으로 검증한 결과 그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총효과 LLCI = .16, ULCI = .79; 직접효과 LLCI = .05, ULCI = .68; 간접효과 LLCI = .01, ULCI = .26)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논 의

연구 1은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두 변인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향상초점 성향이 지배적인 사람일수록 처벌판단을 더 강하게 했다. 또한 조절초점과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처벌과 감경 판단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의 차이가 매개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처벌강도에 한함). 이 결과는 설문조사에 의해서 확인되었는데, 설문조사 방법은 실제 상황에 가까운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외적인 타당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실생활에서 적용 가능성 크다. 그러나 조절초점 이외에 다른 변인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

5) 실제 형법에서의 강도죄(제333조)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예비 연구에서 동 시나리오에 대한 학생들의 형량은 1개월부터 90개월까지 분포하였으며(M = 18.32, SD = 19.02), 이는 최소 3년(36개월)의 형량을 규정한 형법과는 거리가 있었다. 연구 1과 2에서는 실무상 강도가 인정되는 강제력의 수준은 매우 높아서 이를 짧은 시나리오에 표현하기보다 실제 시나리오에 대한 처벌 응답 수준을 고려하여 형량의 범위를 재구성하였다.

6) 고려수준 차이 = 처벌요소 고려수준 - 감경요소 고려수준

www.kci.go.kr

에 조절초점과 처벌판단 간의 관계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인과적인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절초점을 조작하여 실험적인 절차에 의해 가설을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확인된 조절초점성향과 처벌판단 간의 상관관계에 기초하여, 두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절초점 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참여자를 두 개 집단에 무선 할당한 다음, 각각 향상초점과 예방초점을 조작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그 외에 시나리오나 변인 측정에 있어서는 연구 1과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남녀 학부생 69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중 실험 도중 급한 용무로 실험을 중단한 한 명의 참여자, 조작에 실패한 두 명의 참여자(예방초점 조건에 할당되었으나 조작점검에서 가장 높은 향상초점에 해당하는 '3(=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으로 응답), 형량에 대한 응답에서 15년을 부과한(3SD 벗어난 이상값) 한 명의 참여자, 그리고 처벌요소에 편향된 고려를 하고도(고려수준 차이 4이상) 가장 낮은 수준의 처벌판단을 한 두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6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들의 남녀 비율은 각각 46.0%와 54.0%였고, 연령은 18세부터 26세까지 분포하여 평균 20.40세(SD = 1.82)였다.

실험절차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법판단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연구목적과 5,000원을 지급한다는 보상에 관해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한번에 3~7명의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기간 및 시간표로 공고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조를 편성하여 1일 3회 정도 운영하였으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참여자들은 향상초점과 예방초점 조건에 무작위로 배분되었고, 에세이 작성을 통해 조절초점을 점화(priming)하였다. 즉, 향상초점 조건에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관한 글을 A4용지 한 장 가량의 분량으로 쓰도록 하였다(지문: "과거와 현재 당신의 꿈과 희망(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떠올려보신 다음, 그 꿈과 희망을 달성하기(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글의 분량을 채우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꿈과 희망(의무와 책임)이라는 개념에 관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참여자들이 글을 쓰는 데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조작절차가 끝난 다음에는 연구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초점이 연구자의 의도에 맞게 조작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의 결과에 더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3(= 부정적인 결과를 피한다)부터 3(=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까지 7점 척도로 조작점검을 하였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형사사건(편의점 강도사건)에 관한 시나리오를 읽고 다음의 질문들에 응답하였다. 이 질문들은 연구 1에서와 동일하며, 처벌강도와 형량을 묻

www.kci.go.kr

는 질문 각각 1문항과 시나리오의 내용(처벌요소, 감경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을 묻는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참여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거나 설문지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의 목적과 조절초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연구 의도를 파악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실험을 마친 참여자들은 참가비를 지급받고 돌아갔다. 실험소개로부터 사후설명이 끝날 때까지 15분 가량 소요되었다.

결 과

대학생 63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향상초점 조건(n = 29, M = 1.38, SD = 1.45)에서 예방초점 조건(n = 34, M = 0.09, SD = 1.73)에 비해서 긍정적 결과를 얻는 데 상대적으로 더 초점을 맞춘다고 응답하였다. 예방초점 조건과 향상초점 조건 간에 결과에 대한 지향점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므로(t = -3.08, df = 61, p < .01), 조절초점의 조작은 성공적이었다. 처벌강도는 예방초점 조건(M = 4.15, SD = 1.02)에 비해서 향상초점 조건(M = 5.00, SD = .96)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t = -3.40, df = 61, p < .01), 형량도 예방초점 조건(M = 20.88, SD = 15.34)에 비해 향상초점 조건(M = 32.03, SD = 24.63)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 = -2.19, df = 61, p < .05).

연구 2에서도 조작된 조절초점과 처벌요소와 감경요소 간 고려수준 차이, 그리고 처벌강도 간의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PROCESS macro(v3.5)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랩 샘플을 5,000개로 지정하고 신뢰구간을 9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절초점은 고려수준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β = 1.49, p <. 01), 고려수준 차이는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β = .20, p <. 01), 고려수준 차이가 조절초점 조건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 조절초점에서 처벌강도 간의 총효과가 β = .85(p < .01)이었으나, 고려수준 차이가 투입된 후 직접 효과가 β = .55(p < .05)로 감소하여 고려수준 차이가 조절초점과 처벌강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절초점과 처벌강도의 간접효과를 부트스트랩으로 검증한 결과 그 상한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존재하지 않아(총효과 LLCI = .35, ULCI = 1.35; 직접효과 LLCI = .04, ULCI = 1.06; 간접효과 LLCI = .09, ULCI = .57) 간접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형량에 대한 유의미한 매개효과는 확인되지 않아 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가설을 세운 것은 아니지만 조절초점에 따른 선택적인 정보처리 여부도 확인하였다. 즉, 조절초점 집단에 따른 처벌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처벌요소와 감경요소 간의 고려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참여자들이 처벌요소와 감경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을 모두 평가하였으므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PSS 25.0을 활용, 반복측정(Repeated Measure) 방법으로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예방초점 조건에서는 감경요소(M = 4.66, SD = 1.40)와 처벌요소(M = 5.38, SD = .87)에 대한 고려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향상초점 조건에서는 감경요소에 대한 고려수준(M = 3.76, SD = 1.28)과 처벌요소에 대한 고려수준(M = 5.97, SD = .82)의 차이가 컸다. 고려수준에 대한 감경/처벌요소와 조절초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조절초점 조건에 관계없이 감경요소에 비해서 처벌요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 있었지만(주효과: F(1,61) = 41.99, p < .001), 조절초점과의 상호작용효과도 확인되었다(F(1,61) = 10.82, p < .01). 즉, 처벌판단 시 향상초점 조건에서는 판단목표에 부합하는 처벌요소에 더 집중해서 정보처리를 한 반면, 예방초점 조건에서는 처벌요소뿐만 아니라 감경요소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고려하여 정보처리를 한 것이다.

www.kci.go.kr

논 의

연구 1과 2를 통해서 조절초점과 처벌판단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자가 예상한대로 처벌과제를 수행할 때 향상초점 하에서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처벌요소를 더 고려하는 선택적 정보처리를 했다(처벌강도에 한함). 그러나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높은 처벌판단을 하고 처벌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은 목표에 따른 인지적 정보처리의 결과가 아니라 범죄행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향상초점의 반응 특성일 수 있다. 다시 말해 향상초점(성향 또는 상황) 하에서는 처벌요소에 대해 높은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로서 높은 처벌을 하는 것일 수 있다. 예방초점(성향 또는 상황) 하에서는 이와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범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목표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라면 다른 목표 하에서는 처벌판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연구 3

연구 3에서는 조절초점에 따라서 선택적 정보처리의 수준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1과 2에서 확인된 결과가 조절초점에 따른 반응특성이 아니라 목표에 따른 심리적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리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연구 3에서는 조절초점을 독립변인, 처벌판단 목표를 조절변인으로 하여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절초점은 개인의 특성으로 측정하였고, 처벌판단 목표는 조작하였다. 처벌판단 목표 변인은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가중판단 조건과 감경판단 조건이다.

조절효과 검증에 앞서 논의되어야 할 것은 조절초점이 목표나 동기와 관련성이 높다면 처벌판단 목표가 독립변인인 조절초점과 독립적인가 하는 문제이다. 조절초점과 목표의 관련성은 목표의 성격(긍정 vs. 부정)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 방식(접근 vs. 회피)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처벌판단 목표는 처벌판단 과제(감경 vs. 가중)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절초점과 직접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남녀 학부생 8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법학 전공자라고 밝힌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이 학생은 사후설명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법적인 지식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였음을 밝혔다) 최종적으로 84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남녀 비율은 남학생이 42.9%, 그리고 여학생이 57.1%였다. 그리고 참여자들의 연령은 18세부터 30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 연령은 22.38세(SD = 2.35)였다.

실험절차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법판단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연구목적과 5,000원을 지급한다는 보상에 관해 공고를 내고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설문조사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한번에 3~6명의 학생들이 실험실을 방문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연구기간 및 시간표로 공고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조를 편성하여 1일 3회 정도 운영하였으며,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조절초점성향 척도(RFQ. 11문항)에 응답한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다음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처벌강도와 형량을 묻

www.kci.go.kr

는 질문 각각 1문항, 시나리오의 내용(처벌요소, 감경요소)에 대한 고려수준을 묻는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강도사건에 대해서 처벌의 수준을 감경해야 하거나 가중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의 판단과제를 무작위로 할당하였다. 연구 1, 2에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대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는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처벌이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1, 2의 형사사건은 분명한 유죄사건을 다룬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것은 특별한 목표로 작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연구 3에서는 목표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처벌을 가중해야 하는 상황("누범"으로 인한 가중)과 감경해야 하는 상황("자수"로 인한 감경)을 설정한 다음 개인의 조절초점 성향에 따른 처벌판단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두 가지 정보를 통해 처벌판단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리 설정하였다. 첫째,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지시사항이다. 즉, 감경판단 조건에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가중판단 조건에서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판단의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각 조건에서 판단목표에 부합하는 서로 다른 정보가 추가되었다. 즉, 감경판단 조건에서는 자수를 통해 반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가중판단 조건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범죄를 재차 저질렀다(누범에 해당)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다시 말해서 감경과 가중 판단 조건에서의 각 시나리오에 처벌사유와 감경사유를 비대칭적으로 포함시켜서 각각 처벌의 감경과 가중을 유도하였다. 감경판단 조건과 가중판단 조건에서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아래 시나리오에서 괄호 안의 이탤릭체는 가중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판단근거 제시문: 형법 제333조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행한 경우에 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52조 1항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도록(3년 이하 가능)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형법 제35조에서는 이전의 형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재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나리오: A씨는 대낮에 복면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과 손님들을 칼로 위협하고 50만 원 상당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A씨는 범행의 대상이 된 편의점을 미리 관찰하고 칼을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학 졸업 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30대 중반의 나이에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A씨는 생활고를 겪기 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판단 목표 관련 정보: 범행 후 A씨는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경찰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깊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A씨는 몇 년 전에도 한 번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을 살았고, 출소한 지는 1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참여자들에게 이해가 안 되거나 설문지 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연구의 목적과 조절초점의 개념에 대해 설명해주고, 연구 의도를 파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을 마친 참여자들은 참가비를 지급받고 돌아갔다. 실험소개로부터 사후설명이 끝날 때까지 10분에서 15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www.kci.go.kr

결 과

판단목표(1 = 감경판단 조건, 2 = 가중판단 조건)와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조절초점(M = .04, SD = .76)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PROCESS macro(v3.5)의 model 1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 신뢰구간 95%로 설정하였고, 조절초점성향에 대해서는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실시하였다. 연구 1, 2에서 조절초점과 처벌판단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가 확인되었으나, 연구 3의 데이터 분석 결과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판단 차이가 유의미한 반면 조절초점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아 판단목표를 독립변인, 조절초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처벌강도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판단목표는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β = 1.49, p < .001) 감경조건에 비해 가중조건에서 처벌강도가 높았다. 조절초점 역시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β = -1.12, p < .05) 향상초점이 지배적일수록 처벌강도가 낮았다. 그리고 판단목표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항이 처벌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β = .84, p < .05). 상호작용항 추가에 따른 R^2 변화량은 .05(p < .05)로 유의하여 판단목표와 처벌강도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 패턴 확인을 위해 조절초점 저집단(M-1SD), 중집단(M), 고집단(M+1SD)으로 나누어 평균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조절초점 고집단(향상초점이 지배적인 성향)의 경우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가 컸으나, 조절초점 저집단(예방초점이 지배적인 성향)의 경우 판단목표에 따른 처벌강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한 결과 조절초점 고집단(B = 2.44, p < .001)과 조절초점 저집단 모두 기울기는 유의미하였으나(B = 1.18, p < .001) 저집단에 비해 고집단에서 기울기가 더 컸으며, 판단목표에 따라 처벌강도가 역전되었다. 즉, 조절초점 고집단은 가중조건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강도를 보였으나, 감경조건에서는 더 약한 처벌강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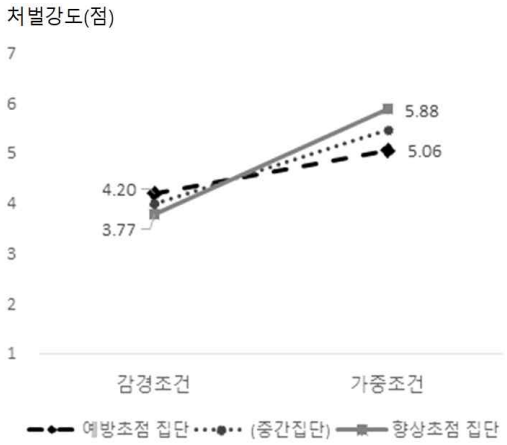

그림 1. 처벌강도에 대한 판단목표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 효과

다음으로 형량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 결과, 판단목표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β = 36.27, p < .001) 감경조건에 비해 가중조건에서 형량이 높았다. 조절초점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β = -14.07, n.s.). 판단목표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항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조절효과가 있었다(β = 9.90, p < .05). 상호작용항 추가에 따른 R^2 변화량은 .02(p < .05)로 유의하여 판단목표와 형량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조절효과가 유의하였기 때문에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절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 패턴 확인을 위해 조절초점 저집단(M-1SD), 중집단(M), 고집단(M+1SD)으로 나누어 평균 변화량을 살펴보았다. 조절초점 고집단(향상초점이 지배적인 성향)의 경우 판단목표에 따른 형량의 차이가 컸으나, 조절초점 저집단(예방초점이 지배적인 성향)의 경우 판단목표에 따른 형량 차이가 상대적으로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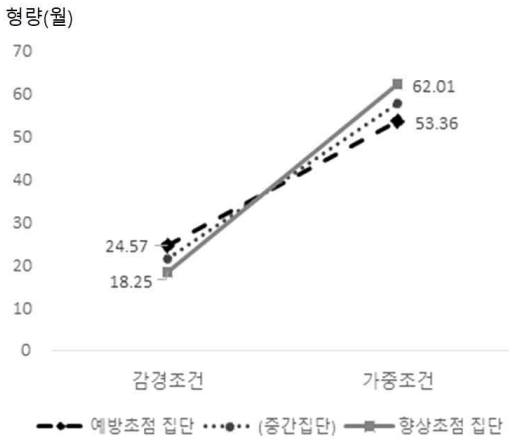

그림 2. 형량에 대한 판단목표와 조절초점의 상호작용 효과

작았다. 단순 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한 결과 조절초점 고집단(B = 47.58, p < .001)과 조절초점 저집단 모두 기울기는 유의미하였으나 (B = 32.61, p < .001) 저집단에 비해 고집단에서 기울기가 더 컸으며, 처벌강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단목표에 따라 형량이 역전되었다.

논 의

연구 3을 통해 조절초점에 따라 판단목표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조절초점은 가중판단 조건에서는 연구 1과 연구 2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감경판단 조건에서는 반대로 처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절초점에 따라서 일정한 처벌 경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벌판단 상황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연구 3의 결과뿐만 아니라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 역시 특정 판단목표 하에서 조절초점에 따른 목표추구방식의 차이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조절초점에 따른 자기조절 방식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예상대로 처벌판단에서 조절초점에 따른 선택적 정보처리가 발생하고, 이 선택적 정보처리가 처벌판단을 매개하였다. 즉, 향상초점 하에서는 의사결정 시 처벌목표에 부합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처리함으로써 처벌판단 수준이 높았던 반면, 예방초점 하에서는 처벌목표와 무관한 정보까지 처리함으로써 처벌판단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절초점에 따라 과제수행 또는 목적에 적합한 정보들을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기존 연구(Codini, Miniero & Bonera, 2018; Friedman & Förster, 2001; Pham & Chang, 2010)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구 3에서는 연구 1, 2를 토대로 처벌판단에서 독립변인 역할을 하고, 처벌목표가 조절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처벌목표와 처벌판단의 관계에서 조절초점의 조절변인 역할을 확인했지만, 이는 조절초점과 처벌판단의 관계에 있어 의미 있는 결과였다. 향상초점이 지배적인 경우 가중판단을 할 때는 더 높은 처벌을, 감경판단을 할 때는 더 낮은 처벌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목표추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예방초점에 비해서 향상초점 하에서 판단자들이 더 목표지향적이며, 목표의 변화에 따른 자기조절 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역시 조절초점에 따라서 조절강도에 차이가 있다는 기존 연구(Dholakia et al., 2006; Kumar, Budhwar, Patel & Varma, 2019; Zhu & Meyers-Levy, 2007)와 일치한다.

본 연구는 특히 유죄가 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처벌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처벌판단 예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조절초점이라고 하는 보편적 기제에 기초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법적 판단 상황에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배

www.kci.go.kr

심원의 판단에 적용하는 것은 물론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심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검사나 변호사가 유리한 평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배심원의 성격특성을 고려하고 있는데(Clark, Boccaccini, Caillouet & Chaplin, 2007; Moran & Comfort, 1982) 조절초점의 효과 역시 평결 또는 판결의 예측을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주로 향상초점의 영향에 따른 판단 차이가 크게 나타난 만큼 안정적인 판단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법판단에서 향상초점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다.

물론 개인성향의 측면에서 독립적 자기 문화에서 향상초점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상호의존적 자기 문화에서는 예방초점이 강한 특성이 확인되는 만큼(Lee, Aaker & Gardner, 2000; Uskul, Sherman & Fitzgibbon, 2009) 개인성향에 따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다. 또한 상황적인 측면을 고려해보면, 실제 재판 상황은 엄격한 분위기 하에서 집단적으로 이뤄진다. 법원의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들이 판사들에 비해서 더 유죄판결에 소극적인 점(Eisenberg et al., 2005; Kim, Park, Park & Eom, 2013)을 보더라도, 배심원들이 배심판단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예방초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1년 간의 국내 배심제 시행 성과 분석(2008～2018)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477건 중 93.5%에서 배심원과 판사 간 판단결과가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심원이 무죄 평결, 판사가 유죄판결을 한 것(박미숙, 서주연, 최이문, 2019)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판단이 법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예방초점(성향 또는 상황)의 영향이 큰 경우 판단자들이 사법판단 절차에서 단계별로 부여되는 목표나 원칙에 따른 의사결정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라는 사법판단의 대원칙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판단 경향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처럼 국내 환경을 살펴봤을 때 재판에서 예측 밖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재판에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기 마련이다. 검사와 변호사가 각자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려 노력한다. 특히 소송당사자들은 배심원이나 판사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판단자의 감정에 소구하거나 변화를 촉구하는 주장을 하여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 또한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등장하거나 새로운 적용 법률이 발견되는 등 기존의 판단을 뒤흔드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판단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처벌판단시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정확하게 확인시키는 것이 상황적인 요인의 효과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판단자의 편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토론이나 반사실적 사고를 통해 효과적인 탈편향을 유도하는 것(고민조, 박주용, 2020)도 결국 판단자 상호 간에 이러한 원칙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연구 1, 2에서 향상초점 하에서 높은 처벌을 하고 예방초점 하에서 낮은 처벌을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정적인 대상에 대해 회피 경향이 강한 예방초점 하에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작위범에 대한 평가에서 향상초점이 아닌 예방초점을 가진 참여자의 평가가 더 부정적이었다(Camacho et al., 2003).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조절초점과 일치하는 행동방식에 대해 선호하는 조절부합(regulatory fit)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는데, 연구 3의 결과에서도 조절초점과 처벌판단 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아 조절초점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처벌판단은 두 가지

www.kci.go.kr

단계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먼저 평가의 단계에서는 행위에 대한 인지적 판단 및 평가를 하고, 처벌단계에서는 처벌수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며, 이 두 단계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이다. 본 연구만으로 이러한 추론을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절초점이 사법판단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조절초점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유죄가 확실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여 판단을 내리게 했기 때문에 처벌이 목표로서 작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 유무죄 자체가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또한 본 연구에서 평이한 형사사건을 다룸으로써 대체로 객관적인 인지적 평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판단자의 법감정을 자극하는 잔혹하고 심각한 범죄를 사례로 사용하였다면 조절초점에 따른 사건의 부정성·심각성 평가의 차이로 인해 그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예방초점이 강한 개인의 부정적 평가가 강하게 나타나 처벌판단에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강도라는 동일한 범죄 유형으로 연구 1, 2, 3을 수행하였다. 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강도 이외의 다른 범죄유형에서 또는 수법의 잔인성, 결과의 심각성 등 다른 속성을 가진 사건을 자극으로 사용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처벌판단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처벌강도와 형량을 사용하였다. 처벌강도에서는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결과들이 확인되었지만 형량의 경우에는 결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개인간 편차가 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주관적 평가의 성격을 띠는 처벌강도와 비교적 객관적인 처벌수준 평가의 성격을 띠는 형량 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주관적으로 처벌수준을 높거나 낮게 평가하는 것과 형량 부과 수준 간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사람마다 형량의 많고 적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이 거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형량에 대한 주관적 의미와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윤상연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에서 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범죄통계, 범죄심리 분야를 주로 연구하며 최근 <법정 및 범죄심리학 입문(5판)>을 번역하였다.

김혜진은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문화사회성격심리 연구실 박사과정에 있으며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로 진술분석, 면담기법을 비롯한 법심리학 및 범죄심리학에 관심을 두고 있다.

허태균은 미국 Northwestern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는 사회적 판단과 착각, 사후가정사고와 후회, 문화와 사고과정, 법적 판단, 여가심리 분야에 있다.

참고문헌

고민조, 박주용 (2020). 피고인의 성격증거로 유도된 편향 감소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법, 11(1), 63-87.

김상준 (2015). 사실인정과 의사결정 모델에 관한 법심리학적 연구동향. 법학평론, 5, 8-66.

www.kci.go.kr

김청택, 최인철 (2010). 법정의사결정에서의 판사들의 인지편향. 서울대학교 법학, 51(4), 317-345.

박광배, 김상준, 한미영 (2005). 가상적인 재판 쟁점에서의 현역판사의 판단과 모의배심의 집단판단에 대한 인지적 방략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1), 59-84.

박미숙, 서주연, 최이문 (2019).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XIII): 국민참여재판 시행 10년차 평가와 정책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다니, 박광배 (2017). 강간사건의 사실인정에 대한 양형인자와 편향요인의 효과: 피해자 나이와 판단자성별. 한국심리학회지: 법, 8(3), 213-228.

이상돈 (2005). (새로 쓴) 법이론. 서울: 세창.

이유미, 조영일 (2020). 사법적 의사결정시 나타나는 배심원 판단편향: 검사구형량의 정박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법, 11(3), 329-347.

한유화, 박광배 (2018). 유일한 증거와 일반인의 법적 판단: 과대추정된 사후확률과 유무죄 판단의 역치. 한국심리학회지: 법, 9(1), 1-19.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argh, J. A. (1997). The automaticity of everyday life. In R. S. Wyer Jr. (Ed..) *The automaticity of everyday life* (pp. 1-62). Mahwah, NJ: Erlbaum.

Bargh, J. A., Gollwitzer, P. M., Lee-Chai, A., Barndollar, K. & Trötschel, R. (2001). The automated will: Nonconscious activation and pursuit of behavioral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14-1027.

Becker, G. 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1-54.

Bornstein, B. H. & Greene, E. (2017). *The jury under fire: Myth, controversy, and reform.*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Bruner, J. S., Goodnow, J. J. & Austin, G. A. (1956). *A study of thinking.* New York, NY: Wiley.

Bryant, P. & Dunford, R. (2008). The influence of regulatory focus on risky decision-making. *Applied Psychology, 57*(2), 335-359.

Camacho, C. J., Higgins, E. T. & Luger, L. (2003). Moral value transfer from regulatory fit: What feels right is right and what feels wrong is wro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3), 498-510.

Carlsmith, K. M., Darley, J. M. & Robinson, P. H. (2002). Why do we punish?: Deterrence and just deserts as motives for punis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284-299.

Clark, J., Boccaccini, M. T., Caillouet, B. & Chaplin, W. F. (2007). Five factor model personality traits, jury selection, and case outcomes in criminal and civil case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4*(5), 641-660.

Codini, A. P., Miniero, G. & Bonera, M. (2018). Why not promote promotion for green consumption? The controversial role of regulatory focus. *European Business Review, 30*(5), 554-570.

Crowe, E. & Higgins, E. T. (1997). Regulatory focus and strategic inclinations: Promotion and prevention in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9*(2), 117-132.

Dholakia, U. M., Gopinath, M., Bagozzi, R. P. & Nataraajan, R. (2006). The role of regulatory focus in the experience and self-control of desire for temptations.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6*(2), 163-175.

Eisenberg, T., Hannaford-Agor, P. L., Hans, V. P., Waters, N. L., Munsterman, G. T., Schwab, S.

www.kci.go.kr

J. & Wells, M. T. (2005). Judge-jury agreement in criminal cases: A partial replication of Kalven and Zeisel's The American Jury.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2*(1), 171-207.

Feigenson, N. (2000). *Legal blame: How jurors think and talk about accid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Fiske, S. T., Gilbert, D. T. & Lindzey, G. (Eds.) (2010).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Hoboken, NJ: John Wiley & Sons.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Förster, J., Friedman, R. S. & Liberman, N. (2004). Temporal construal effects on abstract and concrete thinking: Consequences for insight and creative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7*(2), 177-189.

Frey, D. (1986). Recent research on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1), 41-80.

Friedman, R. S. & Förster, J. (2001). The effects of promotion and prevention cues on creat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01-1013.

Gewirtz, P. (1996). On "I know it when I see it". *Yale Law Journal, 105*, 1023-1047.

Goodenough, O. R. (2001). Mapping cortical areas associated with legal reasoning and moral intuition. *Jurimetrics, 41*, 429-442.

Graziano, S. J., Panter, A. T. & Tanaka, J. S. (1990). Individual differences in information processing strategies and their role in juror decision making and selection. *Forensic Reports, 3*(3), 279-301.

Guthrie, C., Rachlinski, J. J. & Wistrich, A. J. (2000). *Inside the judicial mind. Cornell Law and Review*, 86, 777-830.

Hagan, J. (1973).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An assessment of a sociological viewpoint. *Law and Society Review, 8*, 357-284.

Hart, W., Albarracín, D., Eagly, A. H., Brechan, I., Lindberg, M. J. & Merrill, L. (2009). Feeling validated versus being correct: A meta-analysis of selective exposure to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55-588.

Harris, A. P. & Sen, M. (2019). Bias and Judging.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2,* 241-59.

Haws, K. L., Dholakia, U. M. & Bearden, W. O. (2010). An assessment of chronic regulatory focus measur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7*(5), 967-982.

Higgins, E. T. (1996). The "self digest":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6), 1062-1083.

Higgins, E. T. (1997). Beyond pleasure and pain. *American Psychologist, 52*(12), 1280-1300.

Higgins, E. T. (2002). How self-regulation creates distinct values: The case of promotion and prevention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2*(3), 177-191.

Higgins, E. T. (2011). *Beyond pleasure and pain: How motivation work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Higgins, E. T., Friedman, R. S., Harlow, R. E., Idson, L. C., Ayduk, O. N. & Taylor, A. (2001). Achievement orientations from subjective histories of success: Promotion pride versus prevention prid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1*(1), 3-23.

Kaplan, M. F. & Kemmerick, G. D. (1974). Juror judgment as information integration: Combining evidential and nonevidential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4), 493-499.

Kim, S., Park, J., Park, K. & Eom, J. S. (2013). Judge-jury agreement in criminal cases: The first

www.kci.go.kr

three years of the Korean jury system. *Journal of Empirical Legal Studies, 10*(1), 35-53.

Korobkin, R. B. & Ulen, T. S. (2000). Law and behavioral science: Removing the rationality assumption from law and economics. *California Law Review, 88*(4), 1051-1144.

Kumar, R., Budhwar, P., Patel, C. & Varma, A. (2019). Self-regulation and expatriate adjustment: the role of regulatory fit.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29*(4), 00666.

Kramer, J. H. & Ulmer, J. T. (2009). *Sentencing Guidelines: Lessons from Pennsylvania*.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Lee, A. Y., Aaker, J. L. & Gardner, W. L. (2000). The pleasures and pains of distinct self-construals: The role of interdependence in regulatory foc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6), 1122-1134.

Locke, E. A., Bryan, J. F. & Kendall, L. M. (1968). Goals and intentions as mediators of the effects of monetary incentives on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2*(2), 104-121.

MacKinnon, D. (2008). *Introduction to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New York, NY: Routledge.

Montesquieu, B. D. (1949). *The spirit of the laws (Vol. 2)*. New York, NY: Hafner Press.

Moran, G. & Comfort, J. C. (1982). Scientific juror selection: Sex as a moderator of demographic and personality predictors of impaneled felony juror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5), 1052-1063.

Orth, U. (2003). Punishment goals of crime victims. *Law and Human Behavior, 27*(2), 173-186.

Oswald, M. E., Hupfeld, J., Klug, S. C. & Gabriel, U. (2002). Lay-perspectives on criminal deviance, goals of punishment, and punitivity. *Social Justice Research, 15*(2), 85-98.

Pennington, N. & Hastie, R. (1992). Explaining the evidence: Tests of the Story Model for juror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2), 189-206.

Pennington, N. & Hastie, R. (1993). Reasoning in explanation-based decision making. *Cognition, 49*(1), 123-163.

Pham, M. T. & Avnet, T. (2004). Ideals and oughts and the reliance on affect versus substance in persuas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0*(4), 503-518.

Pham, M. T. & Chang, H. H. (2010). Regulatory focus, regulatory fit, and the search and consideration of choice alternativ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7*(4), 626-640.

Pham, M. T. & Higgins, E. T. (2005). Promotion and prevention in consumer decision-making. In S. Ratneshwar & D. G. Mick (Eds.) *Inside consumption: Consumer motives, goals, and desires* (pp. 8-43). New York, NY: Routledge.

Posner, R. A. (1985). An economic theory of the criminal law. *Columbia Law Review, 85*, 1193-1231.

Rachlinski, J. J., Johnson, S. L., Wistrich, A. J. & Guthrie, C. (2009). Does unconscious racial bias affect trial judges. *Notre Dame Law Review, 84,* 1195-2269.

Sanbonmatsu, D. M., Posavac, S. S., Kardes, F. R. & Mantel, S. P. (1998). Selective hypothesis testing. *Psychonomic Bulletin & Review, 5*(2), 197-220.

Schauer, F. (2008). Is there a psychology of judging? *Harvard University Faculty Research Working Project Series*,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1015143.

Scholer, A. A., Stroessner, S. J. & Higgins, E. T. (2008). Responding to negativity: How a risky tactic can serve a vigilant strateg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67-774.

Simon, H. A. (1972). Theories of bounded rationality.

www.kci.go.kr

Decision and organization, 1(1), 161-176.

Simon, D. (2004). A third view of the black box: Cognitive coherence in legal decision mak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71*(2), 511-586.

Simon, D. (2012). *In doubt: The psychology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Simon, D., Stenstrom, D. M. & Read, S. J. (2008). *On the objectivity of investigations: An experiment.*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for Empirical Legal Studies.

Uskul, A. K., Sherman, D. K. & Fitzgibbon, J. (2009). The cultural congruency effect: Culture, regulatory focus, and the effectiveness of gain-vs. loss-framed health messag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5*(3), 535-541.

Voeten, E. (2019). Gender and Judging: Evidence from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SSRN Electronic Journal(3322607).*

Wallace, J. C., Butts, M. M., Johnson, P. D., Stevens, F. G. & Smith, M. B. (2016). A multilevel model of employee innovation: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thriving, and employee involvement climate. *Journal of Management, 42*(4), 982-1004.

Weiner, B. (199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NY: Guilford Press.

Wistrich, A. J., Guthrie, C. & Rachlinski, J. J. (2005). Can judges ignore inadmissible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deliberately disregarding.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53,* 1251-1345.

Zhu, R. J. & Meyers-Levy, J. (2007). Exploring the cognitive mechanism that underlies regulatory focus effec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34*(1), 89-96.

1 차원고접수 : 2020. 09. 24.
수정원고접수 : 2021. 02. 15.
최종게재결정 : 2021. 02. 19.

www.kci.go.kr

韓國心理學會誌: 社會 및 性格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021, Vol. 35, No. 1, 99-119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1.005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Legal Decision Making: the Role of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Sangyeon Yoon **Hye Jin Kim** **Taekyun Hur**

Police Science Institute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Based on regulatory focus theory, the current study tested the effect of promotion and prevention foci on legal decision making. In particular, it aimed to uncover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penalization (punishment level and sentence) in criminal cases and the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 Study 1 verified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penalization as well as the role of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The result of a survey with a case scenario showed that information selection process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regulatory focus and level of punishment. That is, stronger the promotion focus, higher the level of punishment and larger the ratio for considering the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unishment level. Study 2 re-verified the results of study 1 in terms of causal relations. As the result of an experiment with priming regulatory focus to see the pattern of penaliz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mediated the two variables in penaliza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focus (only for punishment level), which was in line with the result of study 1. Study 3 aimed to find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in terms of motivation by verifying whether the effects of judgment goal change in accordance with regulatory focus. The effects of judgment goal differed depending on regulatory focus conditions. That is, with stronger promotion focus the difference in punishment level was larger, whereas it was smaller when prevention focus was predominant. The current study showed that the effects of regulatory focus on penalization was mediated by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and influenced by motivated goals. Lastly,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results in criminal judgment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regulatory focus, legal decision making, sel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goals and motivations

www.kci.go.kr